野 "문제 후보들 지명 철회하라" 與 "청문회서 시시비비 가려야"

야권 공조 속 전방위 대응… 與, 야 요구 일축 정면돌파

8·8 개각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은 적극적인 공조 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 후보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정면 돌파키로 결정하면서 20일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첨예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인사청문회가 하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어 당력을 집중한다는 각오다.

◇야당=민주당과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4당은 17일 '인사청문회 공조'에 시동을 걸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내정자 전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야 4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는 데 이어 19일에는 명동성당에서 노무현재단과 함께 파면 및 구속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상임위별 인사청문회 전략과 대응 기조를 점검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며 총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그동안 조 내정자를 집중 겨냥했던 데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등으로 전선을 넓히는 동시에 현 정권 인사검증시스템의 결함을 부각시키며 기선 잡기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석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에 탈세까지 4대 필수과목을 정해놓고 최소한 한두 개 과목은 이수해야 장관이나 청장이 된다. 도덕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며 철저한 검증 의지를 밝혔다.

◇여당=한나라당이 이날 야 4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최종방침을 확인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리 문제가 있는 내정자를 감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청문회를 열어야 하고, 내정자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당의 최종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면돌파 기조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박연차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느냐"며 "청문회의 핵심은 박연차 사건인 만큼 증인채택을 피할 수 없었고 정면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및 천안함 유가족 관련 발언 파문을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조 내정자를 감쌀 이유는 없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당사자 입장을 청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연차·남상태 입 청문회 '태풍' 될까

김태호·이재오 후보자 증인으로 채택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각각 증인으로 채택돼 인사 동의 과정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회장을 비롯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이인규(당시 대검 중수부장) 변호사와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당시 대검 중수1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김 후보자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4월 경남 밀양시에 영어도시를 유치하고자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한인 식당 주인 곽모씨를 통해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곽씨가 돈을 직접 건넨 것이 아니라 여종업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고, 사건의 결정적인 열쇠를 쥔 여종업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는 25일 청문회에서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건넨 정황에 대한 진술을 직접 이끌어냄으로써 김 후보자의 관련 의혹을 집중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와 관련, 남 사장을 비롯해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대우조선해양 오동섭 경영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 회장과 이 후보자의 최측근인 오 고문은 남 사장 유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에 가장 접근해 있는 박 전 회장과 남 사장의 증인 출석 및 진술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두 증인 모두 실제 증인대에 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불렀지만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정·관계에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며, 지병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아 현재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남 사장이 청문회 날짜에 맞춰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증인으로 결정됐음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일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문회 연석회의 주재하는 박지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상임위 간사단과 인사청문회 관련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오 청문회' 한나라 단독 열기로

민주 "수사대상… 개최 불가" 전체회의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을 밝히며 퇴장, 한나라당 단독으로 23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조 내정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한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일정에 맞춰 청문회를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파면이든 의원면직이든 청문회 과정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고흥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조 내정자에게 어떤 하자가 있고 흠결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어떤 이유가 있어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백원우 간사는 "우리는 조 내정자의 자진사퇴, 청와대 내정 철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위 파면을 요구한다"며 "정상적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날 의결에 동의할 수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검찰 조사 대상인 조 내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것"이라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이윤석 의원과 김충조 의원도 가세했다. /연합뉴스

투기 안되지만 교육은 봐준다?

여권 청문 후보 위장전입 이중잣대 논란

靑 "내부기준 있어" 與 "더 이상은 곤란"

장관·청장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여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위장 전입이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주소를 옮겨놓는 것을 말한다.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번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은 주로 자녀의 교육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5차례 위장 전입했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도 1차례씩 위장 전입했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경기도 용인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5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잣대다. 청와대는 사안별로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때 위장전입에 대한 대토와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중잣대=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위장 전입의 경우 자녀 교육용은 봐주되 재산 증식은 안 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을 알고 있었지만 교육용이어서 봐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기 내각에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자들은 대부분 낙마했다. 하지만, 엄연한 법 위반 사항을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대통령부터 위장전입을 박 먹듯 해 놓으니까 임명직 인사들의 위장 전입을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중잣대=위장전입 문제가 대두돼도 당 지도부와 대변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위장전입을 '쥐잡듯' 몰아세웠다.

2005년 3월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대해 한 부대변인은 "위장전입이네, 명의신탁이네, 취임 이후 땅거래네, 허위해명이네 의혹마다 여느 부동산 투기꾼들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공격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그해 4월15일 홍석현 주미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자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진작 고장 난 것은 알고 있지만, 아예 작동도 안 하기도 하나보다. 만일 만에 하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주미대사 홍석현 카드'를 썼다면 청와대부터 '부정'의 인사를 밀어붙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